

2022년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주의사항]

1.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답안작성 시, 연필 및 볼펜 등을 이용한 예비마킹은 불가합니다.
(필기구 성분에 따라 인식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문제지에 필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도 연습지 없음)
5. 수정테이프 및 계산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 ※ 답안 오마킹 시,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답안지 교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수정테이프 사용 시, 해당 문항의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6. 질문이 있는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시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7.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은 절대 불가하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8. 감독관의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의 서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기재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엄격히 제한합니다.
 - ※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시험에 응시하겠습니다. 수험자 _____ (서명)

1. 다음 대화는 국민의 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당원들의 토론이다.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와 가장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석준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은 법의 그늘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봐. 법은 법률가들이 전문가이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아.
현기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야.
진현	그렇다면 법관의 정치적 판결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정파에 대한 찬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경미	또한 사법제도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법적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고양하기 위해 앞으로 사법제도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야.

- ① 석준 ② 현기 ③ 진현 ④ 경미

2. 정강·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공통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 이 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다짐을 담고 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보자 연설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 사람은?

안교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모두에게 동등한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영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도 이어갈 것입니다.
용희	우리는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므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가꿔온 산림을 파괴하는 주범인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민승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중심의 복지 체계 개편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입니다.
진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 ① 안교, 용희 ② 안교, 민승 ③ 태영, 용희 ④ 민승, 진표

3. 다음은 시도당 대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의 대화이다. 옳지 않은 내용은?

Q:	당의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주요 당무를 의결하기 위해 '시·도당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 시·도당 대회의 대의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이 반영되어야 하지요?
진수	우리 시·도당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 소속 광역의원도 빼놓을 수 없지요.
태용	시·도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당직자들 역시 참여 대상입니다.
석영	대의원 구성원 수는 유권자수의 5%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최대 인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동의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시·도당 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명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 ① 진수 ② 태용 ③ 석영 ④ 동의

4. 다음은 (A)당원 협의회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원 현황 일부이다. 이 중에서 책임당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몇 명인가?

(A)당원협의회 당원 현황

번호	성명	나이	당원가입기간	당해 당비 납부 횟수	비고
...					
701	김○○	55	0개월	0회	※ 전직 공무원,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당비 납부 완료
702	박△△	26	1개월	1회	※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부여
703	이○△	44	24개월	4회	
704	정□□	37	12개월	3회	
705	최◇◇	67	30개월	0회	
706	한□○	72	360개월	11회	
...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5. 다음 중 당원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 인구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②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지원하며,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당세 확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 시·도당, 중앙당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당원협의회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6. 다음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상기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④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7. 다음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중 일부이다. ㉠~㉣중 맞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의 특정 사회단체에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통신비용과 인건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선거기간 중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물이나 돈봉투를 배부하는 행위를 할 시에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도 매수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매수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의 대가로 회계책임자에게 법정수당과 실비는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내에 소재하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 ② 입후보예정자가 설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③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에서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밝히는 행위

9.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영탁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언급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찬원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한 확장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참여와 병행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희재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자신의 육성을 녹음한 ARS를 이용하여 투표참여와 병행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① 영탁 ② 동원 ③ 찬원 ④ 희재

10. 다음 중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하여 지방선거 출마후보자가 지역선관위에 문의한 것에 대해 잘못된 답한 곳은?

A지역 선관위	Q: 문자메시지는 반드시 본인만이 발송해야 하나요?
	A: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B지역 선관위	Q: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A: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C지역 선관위	Q: 수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A: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각 선택하여 한번 클릭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D지역 선관위	Q: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전송 횟수에 포함되나요?
	A: 유료 또는 무료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송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A지역 선관위
- ② B지역 선관위
- ③ C지역 선관위
- ④ D지역 선관위

11. 다음 중 국민의힘 대북정책 및 기조가 아닌 것은?

가: 상호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
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라: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2. 다음 중 북한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A: 북한은 모든 인민을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3계층으로 분리하였는데, 각 계층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은 모두 평등해.
B: 북한은 신정 왕조체제가 아니라 일당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 해당해.
C: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했어.
D: 북한도 법으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지만,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로 당선되고 있어.

- ① A, B ② A, C ③ B, D ④ C, D

13.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하여 잘못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A: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구실삼아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항의나 폭파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 통과시켰어.
B: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4년째 공석이니,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사장 되었다고 할 수 있어.
C: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아 기르다가 한국에 데려온 자녀(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양육가산금을 지급했어.
D: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 ① A ② B ③ C ④ D

14. 다음 중 한미동맹의 현황을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2019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② 임기 중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은 이명박 정부는 약 2개월, 박근혜 정부는 약 5개월, 문재인 정부는 1년 이상이다.
 ③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식 가입하였다.
 ④ 2019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상태가 발생했다.

15. 일본은 정부 핵심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을 강조해왔으며, 미국 역시 혁신경쟁법안에 경제안보 현안을 전담하는 기술파트너십 부서 신설 지시를 포함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올바르게 제안한 것은?

- ① 외교·안보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② 타국과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대한민국만의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외교장관 회의, 차관급 전략 대화 등을 통해 전략물자 수급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④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를 활성화하여 타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파악하고 투자보다는 경쟁을 우선으로 한 교역을 해야 한다.

16. 다음 밑줄 친 내용 중 잘못된 설명을 고르면?

<p>재외동포는 ㉠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모두 포함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한국계 외국인도 재외동포에 포함되지만, 잠깐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계 외국인은 재외동포에 포함된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신청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단기 해외여행자는 재외동포 혹은 재외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p>
--

-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성폭력 없는 사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10대 약속>

9-2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등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장애인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와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 ① 갑석 : 하드웨어인 카메라 위주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정책으로도 온라인 음란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어.
- ② 을준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2011년부터 매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여.
- ③ 병호 : 다크웹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N번방 사건이야. 이러한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리 당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시점이야.
- ④ 정수 :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철두철미한 성윤리의 적용이 필요해. 국가 차원에서 성윤리에 대한 현장을 만들고 이를 모든 공공기관 및 학교에 게시하여 매일 암기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겠어.